

특별기고

모 정 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제방 유실, 도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방하천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국가하천에 비해 정비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제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만으로 예방 중심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비가 시급한 하천도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업 순위에 서 밀리고,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지방하천의 안전 수준이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나의 유역을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은 지방하

천의 배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하천의 범람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하천은 행정구역이나 관리 주체에 따라 나뉘어 흐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행 하천관리체계는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하고 있어 갈수록 복잡화·대형화되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23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나 적용 대상이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구간에 한정돼 있어 상습 침수나 범람 위험이 큰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지방하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홍수 위험과 국가하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계획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하천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국회는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기준과 국가·지방정부의 역할,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산강과 섬진강을 비롯한 국가하천과 수많은 지방하천이 하나의 유역을 이루고 있다. 도심과 농어촌, 해안과 산간지역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지형 특성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와 범람 위험도 매우 높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역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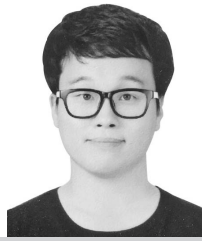
법률 개정이 제도 도입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정부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과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하천의 위험도와 정비 시급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예방 중심의 정비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위험한 하천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하천 안전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기고

송 천 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으로 연 매출 수억원’, ‘지방소멸을 막을 농촌의 원동력’ 등 언론과 정부가 청년농업인을 조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들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에 젊은 피를 이식하겠다는 명목 아래, 매년 뒤에 가려진 농촌 현장의 민낯은 사뭇 다르다. 부푼 꿈을 안고 농촌에 발을 디딘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성공 신화’가 아닌, 하루하루 견뎌내야 하는 처절한 사투이자 냉혹한 현실이다.

오늘날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진입 허들’은 생각보다 까마득히 높다.

가장 대표적인 허들은 단연 초기 자금과 농지 확보다. 정부가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청년이 언젠가 갈아야 할 ‘옹자(대출)’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현대식 스마트팜 온실 한 동을 짓는 데만 수억원이 들고, 치솟는 농지 가격까지 감안하려면 지원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상당수의 청년농들은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대한 부채를 지는 높은 허들에

청년농업인의 숨겨진 눈물

가로막힌다. 시작부터 어깨를 누르는 채무 부담은 도전 정신을 차갑게 식히는 무거운 짐이 된다.

어렵사리 자금을 마련해 농지를 구하려 해도 또 다른 벽이 기다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의 농지은행 제도가 존재하지만 시설 원예나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우량 농지는 이미 기존 농가들이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매물 자체가 드물다.

어렵게 구한 농지는 옹수 시설이 불량하거나 진입로가 좁아 초기 생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원하는 땅 한 평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현장에서 청년들은 시작부터 깊은 무력감을 경험한다.

진입 허들을 겨우 넘었다 해도 현장에서 겪는 애환과 눈물은 더욱 짙어진다. 생물(生物)을 다루는 농업의 특성상 기술 숙련과 환경 적응에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갑작스러운 가뭄, 예측 불가능한 병해충 등 자연재해라도 한 번 맞닥뜨리면 첫째 농사를 통째로 망치기 십상이다.

현재 정책 자금은 보통 5년 거쳐 상환 조건이 적용돼 당장의 원금 상환은 유예되지만, 소득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치 기간이 끝나가면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시한폭탄처럼 다가온다. 정부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단기적인 버팀목이 돼주지만 영농 경영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기술과 유통의 한계도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스마트팜을 지향하며 들어왔지만, 지방 현장의 전문 컨설팅 및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복잡한 환경에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 구조와 가격 변동성 속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직거래나 온라인 판로를 직접 개척하느라 농사와 마케팅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의 피로는 극에 달한다.

여기에 열악한 정주 여건과 문화적 소외감은 젊은 농부들의 정신적 고립을 심화시킨다. 의료·문화·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환경은 자녀 양육을 고민하는 청년 부부들에게 정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기존 지역 사회와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역시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이처럼 자금 압박, 소득 불안정, 정주 여건 부족이라는 다중고가 겹치면서 초기 정착에 실패하고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실패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농업 경쟁력 약화와 농촌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손실이다.

이제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들어온 청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입 허들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정착’을 돕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는 화려한 청사진에 가려진 현장 청년농들의 애환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높은 허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사다리를 놓아줘야 할 때다.

독자투고

고속도로 위치좌표는 ‘생명선’

운전을 하다보면 고속도로 우측 경계석이나 가드레일 부근에서 초록색 바탕에 흰 숫자가 적힌 소형 표지판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가령 ‘123.4’ 등이 포함된 숫자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작은 표지판이 사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위치좌표’라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의외로 많지 않다.

표지판의 정식 명칭은 ‘고속도로 기점 표지’다 해당 고속도로의 시작점(기점)으로부터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를 km 단위로 알려주는 장치다.

큰 숫자는 100m를 뜻한다. 이 표지판은 200m 간격으로 설치돼 운전자는 자신이 기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골든타임 단축은 순전히 정확한 위치 정보에 달려 있다. 200m마다 서 있는 작고 소박한 숫자 표지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고속도로 이용자의 생명선이다. 운전자 모두가 표지판의 의미를 숙지하고 평소 운전중에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뜻밖의 위기 상황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치좌표’에 대한 관계기관의 홍보와 함께 운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임승환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4팀장

사설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 최소화해야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이 9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안은 교통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관계기관, 운수업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노선체계 단순화와 이동 편의성 강화가 핵심이라고 한다.

개편안에는 동·남구는 외곽 생활권 교통망 보완, 서·북구는 통학수요 반영, 광산구는 이동거리가 긴 지역특성을 고려한 급행축 강화 등 각 자치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노선조정이 담겨 있다.

이를 들여다 보면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노선번호 앞에 붙었던 지역명은 삭제하고 기존 숫자는 최대한 유지키로 했다.

또 병원, 대학, 철도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은 우회 구간을 줄여 직선화하고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구간에는 직행·급행 노선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지역별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노선도 대폭 반영했다. 그동안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았던 약 35.9km 구간에는 신규 노선을 투입키로 한 것이다.

신규 정류소는 광주 시내 53곳과 답양·장성 등 시외지역 16곳 등 모두 69곳에 설치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방면은 5회, 혁신도시 방면은 2회 탄력형 출근버스를 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 증차는 없지만 전체 노선은 현행 103개에서 118개로 15개가 늘어나고 평균 배차간격은 25.2분에서 20.7분으로 4.5분 줄고 하루 운행횟수도 8394회에서 9355회로 961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6일까지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과 5개 자치구 순회 공청회도 열었다.

주민들은 순회 공청회에서 노선 신설과 조정보다는 배차간격과 환승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증차 없이 신규 노선을 늘릴 경우 일부 노선의 배차간격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별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내달중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로 등이 바뀌는 노선 개편은 환승 등 기존 익숙한 패턴이 무너져 일시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시는 시행전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전화상담 운영은 물론 책자·포스터·블로그 등을 통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해줄길 바란다.

남구, 여름철 치매환자돌봄 주목받는 이유

폭염에 치매노인 실종이 급증하고 있다. 무더위를 피해 집을 나섰다 가 길을 잃고 장시간 거리를徘徊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치매환자 실종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월평균 1382건인데 기온이 오르는 5~9월에는 월평균 1588건이나 됐다. 폭염이 집중된 7~8월에는 월평균 164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폭염이 이들의 거리徘徊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집안이 덥다고 느끼면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법을 순간적으로 잊어 외출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설령, 집안에 있더라도 갈증이나 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탈수나 온열질환 위험도 높다.

문제는 한 번 집을 나서면 방향감각과 공간 인지 능력 저하로 스스로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짧은 외출이 실종으로 이어지고, 장기화될 경우 극한 폭염 속에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름철이면 그 어느때보다 치매 노인 실종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이들과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폭염 건강관리서비스’가 눈에 띈다. 이는 전화와 문자 상담은 물론 2명으로 된 4개 팀을 구성,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상태 확인은 물론 폭염 예방교육과 냉방용품 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등록된 치매환자 2400명중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중 240여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 낙상이나 심박수 이상,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형태의徘徊감지기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 예방장치로 실종시 수색 시간을 줄이고, 조기 발견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탈수와 열사병 등 2차 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여름철이면 폭염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남구 치매환자돌봄팀이 사전예방책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